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8호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유감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유감

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실장)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 발표한 담화, 성명 등이 이번 김여정 담화보다 더욱 심각한 수위의 '압박'을 담고 있었던 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 관련 기구 "해체" 검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가능성과 같이 구체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북한은 이런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이유로 첫째, 지난 8차 당대회 시 김정은 위원장이 총화보고를 통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는데도 남한이 이를 놓쳐버렸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한이 첨단군사장비 도입,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남한이 이를 묵살하고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으니 그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형식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훈련으로 바뀌어도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요구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던 남한이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체질화되어 치료 불능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며, 이런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마치 남한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응인 것처럼 나름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들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성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남한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각종 무기 시험과 군사훈련을 경계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과 각종 훈련이 단지 방어적인 것이며 정당한 권리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도 핵을 가지지 못한 남한이 미국과 벌이는 극히 축소된 형태의 훈련마저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올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코로나19만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다. 이는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하여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보자면, 남과 북이 서로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전력 증강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근접한 남북한의 경우 한쪽이 방어적 목적을 표방하며 훈련을 하고 무기를 도입해도 정보의 부족 및 불확실성 때문에 이를 공격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갖게 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가 강화되어 상호 참관, 검증 등을 통해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남한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북한 간 군비통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폐기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마치 물고기를 잡겠다면서 그물을 찢는 것과 같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폐기된다면 쌍방이 안보관리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병력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남한 내 여론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과거와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느끼는 두려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는 결국 안보딜레마 심화에 따른 남북한 간 군비

경쟁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정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군사훈련 등 적대행위를 고집하는 남한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므로 대화기구, 교류협력기구들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 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교류협력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은 남한인데 이를 거부해 오기만 하던 북한이 해보지도 않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무의미하다며 관련 기구들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운영하기로 한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그토록 근본적인 문제라면 왜 이 문제를 남한 당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려 하지 않는가?

북한의 호응이 없는데도 대화와 교류협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국내외의 반대여론이 상당함에도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남한 정부가 '호구'여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남과 북의 주민들 모두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간절함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폄하하고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악담이나 퍼붓는다면 남북관계의 복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도 더욱 멀어지게 될 뿐이다. 이처럼 남한이 내민 손을 뿌리치는 것이 과연 스스로를 위해 현명한 일인가?

오늘날과 같은 남북관계 중단 상황도 결국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되었던 평화프로세스가 멈추어 버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되던 평화프로세스가 2019년 초봄의 하노이에서도 진전을 이루었다면 2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문제에 관해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정부의 대미 설득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제와 협력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압박의 시간이 아니라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봄날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